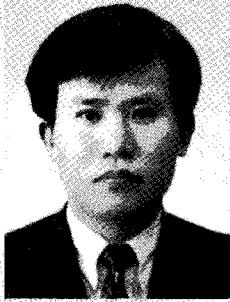


# M&A 활성화와 산업구조조정



김용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M&A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과잉투자, 경쟁력저하의 문제로 산업구조조정의 절박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M&A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M&A에 따른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M&A를 증권거래나 재무기법의 차원을 떠나 산업정책의 중심과제로 인식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간 우리 나라는 M&A와 같은 수단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M&A 시장 자체의 미발달과 기업풍토의 차이로 서구식의 기업매매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데 연유한다. 그러나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M&A가 새로운 전략대안 내지 정책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정은 급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기업결합건

수가 393건에 달해 전년 대비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술한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대량주식 취득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국내기업간 또는 외국기업에 의한 M&A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두 가지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과잉설비 처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산업구조조정 차원의 M&A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기업이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가 우리 나라에서도 현실화됨에 따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향후 기존기업의 리스트럭처링을 통한 경제회생과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 II. 우리 經濟의 現況과 經濟與件의 變化

### 1. 우리 經濟의 現況

우리 나라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8%가 넘는 고도 성장을 지속하여 단기간내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결과 개발초기에는 시장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던 전형적인 후진국 상태에서 이제는 경제규모나 교역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단기간내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개발초기에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유망업종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하는 정부주도 개발전략이 주효한 때문이다. 그리고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이 정신과 잘 살아 보겠다는 Hungry 정신도 왕성하여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뛰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국제정치상황도 우리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차 대전 이후 미소 양극체제하에서 미국은 국제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동맹 관계를 우선시하는 High Politics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었다. 그에 따라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도 비교적 쉽게 수출할 수 있는 무역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아, 한보 등 대

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이에 따라 금융불안이 확산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은 점점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도 떨어지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46개국 중에서 31위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96년 27위에서 4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 2. 우리 經濟 어려움의 原因

최근에 우리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무한경쟁 시대가 가지는 의미와 프리미엄 체질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 世界 經濟環境의 變化 : 無限競爭 時代의 到來

바야흐로 지금 전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동서냉전체제가 시장경제체제의 승리로 종결되자 미국은 자국의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적자라는 쌍둥이 적자의 해소를 위해 경제적 실리추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주창하였고, 그 결과로 WTO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고,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급격히 통합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통합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Mega-Competition)의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 세계적으로 1~2등만 살아남는 시대인 것이다. 지난 200년간 국제무역의 기본원리로 인식되던 '비교우위론'은 퇴색되고 '절대우위론'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MIT대학의 L. Thurow 교수도, 지금까지는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게 되면 모든 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는 Positive-Sum Game이 가능했으나,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Zero-Sum Game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는 공장굴뚝으로 상징되는 산업 사회에서 컴퓨터로 상징되는 지가사회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지가사회에서는 가치창출에 있어 자본·노동 등 종래의 생산요소보다 지식·지혜·정보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고, 기업규모보다는 변화에 대한 적응속도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등 종래의 산업사회와는 패러다임 자체를 달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고급인력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國內 經濟與件의 惡化 : 프리미엄 체질의 고착화**

많은 사람들이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高費用 低效率 經濟構造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외형확대 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5高 3低의 취약성이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5高는 고임금, 고금리, 고지대, 고물류비 및 고규제를, 3低는 저생산성, 저능률, 저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고

임금, 고금리, 고지대 등의 문제가 최근에 와서 겪는 고통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해왔었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우선, 개발년대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각종 정부규제와 보호장치의 잔존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프리미엄 체질이 고착화된 데 있다고 하겠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는 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를 양산하였고, 기업도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사업권 획득이나 기득권 유지 등 특혜 속에 안주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게 되니까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오너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소유·지배구조 및 선단식 경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경우, 오너는 평균 3.7%에 불과한 지분으로 40~50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기업경영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97. 4. 1일 현재 평균 계열사수는 27.3개사, 평균영위업종수도 19.8개에 달하고 있다.

**Ⅲ. 우리經濟의 어려움 克復을 위한 競爭 政策 方向**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서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시장제도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경제운용방식을 과거의 규제와 보호위주에서 개방과 경쟁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도 스스로 내부의 고비용·저효율 요인을 제거하는 등 경영혁신노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근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競爭的 市場構造形成을 위한  
政府와 企業의 役割 再定立**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 경제운용방식은 더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WTO체제가 출범하고 OECD에도 가입한 마당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반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규제개혁작업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인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나, 일반국민과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규제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국가경쟁력강화차원에서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올 4월부터 규제개혁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경제분야 규제개혁작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추진하게 되었다. 공장입지, 물류, 자금조달 등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어 개선이 시급한 8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에 개혁방안을 수립·확정하였고, 하반기부터는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 정보통신, 유통 등 11개 핵심분야에 대하여 진입에서 퇴출까지 전과정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에서는 부처이기주의와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 동안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규제완화로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관련부처의 반대, 그리고 정부규제 속에서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던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작업에 대한 내각 전체의 총의를 모으고 관련 이익단체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부처와 이익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도 스스로 내부의 고비용·저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인 경영혁신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기업은 외부차입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확대하는 등 과거의 경영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는 단순히 외형만 키우고 남의 것을 모방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이다. 제한된 경영자원을 집중하여 전략업종으로 특화하고 전문화시켜야만 한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도 "21세기의 경쟁력은 대기업이 최선이라는 생각과 미국이나 일본을 일방적으로 모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혁신하는 자세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고 충고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은 이미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GE(General Electric)사 잭 웰치 회장은 1981년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이 회사

를 이끌어오면서, 세계 1위 또는 2위인 사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처분·정리하고, 종업원도 45만명에서 22만명으로 삭감하는 등 과감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GE사를 세계 최우량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디즈니社처럼 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마이클 포터교수의 말을 우리 기업들도 깊이 새겨들어야 할 시점이다.

經濟力集中抑制施策의 持續的 推進

최근 경제력집중억제제도가 우리 기업에만 출자, 채무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폐지하거나 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제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건전한 출자 및 채무보증을 유도함으로써 업종전문화, 재무구조 건실화, 경영효율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폐지 주장에 앞서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투자전망이 보이는 부문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과감하게 매각하는 등 스스로 출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오너를 중심으로 한 소수가족에 소유가 집중되어 있고 주요이사결정도 오너의 권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지고 있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한 경영활동의 감시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경영투명성 및 내부감시제도의 개선문제도 아직은 문제제기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도입은 대외신임을 빌미 삼은 반대 때문에 2001년에서야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기업에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의 성장성이나 신용보다는 담보, 채무보증에 주로 의존하고, 사후관리기능도 전무한 실정어서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1~5대 재벌로 제한하지는 주장 또한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다. 1~5대 재벌보다는 오히려 6~30대 재벌의 재무구조가 훨씬 나쁘고, 무분별한 출자 및 채무보증행태도 하위그룹이 더 심각하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보, 삼미, 진로, 우성, 기아 등 부실화 내지 도산된 기업은 전부 하위그룹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핵심제도인 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은 상위그룹보다 하위그룹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대상 축소문제는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배구조의 선진화, 금융대출 관행의 개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연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IV. 맺는 말

한국경제는 더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련의 대형부도사태로 실물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다른 부도사태가 이어진다면 한국경제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경제는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단, 여기에는 경제주체들의 진지한 반성과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운영방식을 과거 정부주도의 규제와 보호시스템에서 시장중심의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업도 모든 정부제도가 기업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영혁신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제도가 국민의 각계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에서는 월간 「공정경쟁」(공정협회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지는 공정경쟁 사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신하고의욕적인 여러분의 글을 다음의 요령대로 보내 주십시오.

####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 분 야 : 공정거래와 관련있는 내용이면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 원고매수 : 수필은 15매, 논문은 35매 정도(200자 원고지 기준),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원고 표지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 원 고 료 : 내용심사 후 게재된 원고는 본 협회에서 정한 원고료를 드립니다.
- 마 감 : 마감일은 따로 없습니다.
- 보 낼 곳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의회관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공정경쟁」 출판 담당자 앞
- 전 화 : (02)775-8870~2
- 팩 스 : (02)775-8873
- PC통신 : kfca2000(hitel, 천리안)